
2017년 국무총리실 업무계획

2017. 1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순서

I. 지난 총리실 업무평가	1
II.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	2
1. 여건 및 전망	2
2. 총리실 업무추진방향	3
III. 주요업무계획	4
1. 안정적 국정운영 보좌	4
2. 소통·현장 중심 국정관리 지원	5
3. 국정 주요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지원	7
4. 선제적 국정현안 대응	8
5. 정책조정 및 갈등관리 강화	9
6. 중점과제 성과체감 제고	10
【붙임】 2017년 주요일정	15
【참고】 지난 4년간 주요 국정성과 및 총리실 성과	17

I. 지난 총리실 업무평가

□ 주요성과

- (국정안정화) 탄핵소추의결 이후('16.12.9~) 국정공백을 방지하고,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비상체제 가동
 - * △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개최 △안보·경제, 민생·안전 관련 현장행보 △사회 각계 원로, 언론, 정치권 등 소통 강화 등
- (국정현안 대응) 총리·장관 주재 국정협의체* 운영 활성화를 통해 메르스, AI 등 주요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
 - * 국무회의('16년 57회), 국가정책조정회의('16년 17회) 등
- (성과창출 지원) 핵심개혁과제, 국정과제,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국가적 개혁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 뒷받침
- (규제혁신) 규제개혁장관회의(대통령 주재),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(총리 주재) 등을 통해 입지·인증·신산업·금융·외투 등 과급력 큰 분야를 개선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력 회복의 기반 마련
 - * 규제신문고를 통한 국민·기업의 규제개혁 참여 확대
- (부패척결) 총리실에 부패척결추진단(14.7월) 설치, 4대 백신프로젝트로 선제적 비리 차단, 국민생활 밀접분야 비리 근절로 청렴사회 구현 노력

□ 시사점

- NIMBY현상 등에 따른 사회갈등의 해소, 저출산·고령화 등 범정부적 현안 관련 조정 필요성 확대
 - ⇒ 현안·이슈 의제설정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·대응을 통해 선제적 문제해결역량 강화 필요
 - 현안·갈등에 대한 입체적·종합적 분석과 함께, 현장중심 문제접근, 조정역량 강화로 정책조정 및 갈등해소의 실효성 제고

※ 참고 : 지난 4년간 주요 국정성과 및 총리실 성과

Ⅱ. 2017년 정책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

1 여건 및 전망

① 국정일반

- 이번 정부 마지막 해로 지난 4년간 정책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, 핵심개혁과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
-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전망

② 외교·안보

- 북한 정권은 2017년에도 핵·경제 병진 노선 하에 김정은 체제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
- 美 트럼프 新행정부 출범, 중국·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·안보 및 통상 현안 등으로 외교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전이 예상

③ 경제·사회

- 미국·신중국 중심으로 국제경기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, 당분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
 - 유가·금리상승 압력, 가계부채 심화에 따른 내수 둔화, 중국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이 우리경제의 회복세 제한 우려
- * '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: 정부 2.6%, OECD 2.6%, KDI 2.4%
- 저출산 고령화, 경제·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, 비정규직 문제, 역사교과서 등 갈등요인이 잠재

☞ 전반적인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, 국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총리실의 '컨트롤타워 역할' 강화 필요

비전

안정적 국정운영 및 국민체감 성과 창출

목표

①확고한 안보 ②경제회복 ③미래대비
④민생안정 ⑤국민안전

추진
방향

안정적 국정운영
보좌

- 권한대행 중심 비상체계 가동
- 국정안정화를 위한 중점분야 선정, 신속 추진

소통·현장 중심
국정관리 지원

- 정치권 협력 강화
- 국민공감 소통 확대
- 시민사회 협력 강화

국정 주요과제의
성공적 마무리 지원

-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 재정비
- 주요과제 마무리를 위한 집중관리
- 주요 국정성과에 대한 대국민 소통 추진

선제적 국정현안 대응

- 전략적 현안 관리
- 국정협의체 운영 활성화

정책조정 및
갈등관리 강화

- 정책조정 체계 강화
- 적극적 공공갈등 관리

중점과제
성과체감 제고

- 규제혁신 등 정책과제 성과 창출
- 부패척결 등 법질서 확립 및 테러 대비
- 주요 국책사업 지원
- 조세심판 및 출연연 관리

Ⅲ. 주요업무계획

1

안정적 국정운영 보좌

- ◆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적극적 보좌를 통해 국정공백을 방지하고, 안정적 국정운영 도모

□ 권한대행 중심 비상체제 가동

- (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) 경제·사회부총리 및 주요 장관들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·결정
 - *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쏠분야에 대한 현안과제 중심 논의
- AI, 사드 배치, 美 행정부 출범 등 핵심현안은 '관계장관회의'를 수시 개최하여 정책방향 공유 및 대책 논의 활성화
- (부처의 자율성·책임성 강화) 부처 장관 중심으로 내각을 운영, 장관에게 정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, 부처간 협업 강화
 - * 경제리스크 관리 등 경제분야 현안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 대응
- 안보·경제·사회 등 분야별 장관회의* 운영을 활성화
 - * NSC상임위원회, 경제·사회관계장관회의, 대외경제장관회의 등

□ 국정안정화를 위한 중점분야 선정, 신속 추진

- 국정 안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△균건한 안보 △경제활력 회복 △미래 대비 △민생 안정 △국민안전에 집중,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 보좌

- (균건한 안보) 軍 대비태세 확립, 대북 제재 관련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
- (경제회복) 금융·경기둔화 등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, 구조개혁 및 신산업창출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추진
- (미래대비)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,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
- (민생안정) 취약계층 지원,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거·복지·고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도모
- (국민안전) 생활·산업 등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, 확고한 방역체계 구축 등 사전예방 및 현장중심 대책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

- ◆ 당·정간 협력 및 사회 각계 소통을 강화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,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

□ 정치권 협력 강화

- (당정협의) 주요 국정현안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당정청 소통·조율 창구로서의 총리실 역할 강화
 - 정부·여당간 고위당정회의, 부처별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정간 사전 의견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
 -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정책의제 발굴,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,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적 파악·관리
- (소통·협력 강화) 국회의장단, 여·야 지도부 등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 행보를 통하여 대국회 협력관계를 보다 공고화
 - 계기시 마다 오·만찬 및 회동, 국회 회기 활용, 국회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맞춤형 소통·협력 기회 강화
 - 여·야 정당과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설명회 확대, 경제 및 현안 중심의 여·야·정 협의체(경제부총리 참석) 지원 강화

□ 국민공감 소통 확대

- (현장중심 소통) 각계각층 간담회, 국정운영 및 민생 현장중심의 행보 확대 등 국민 의견청취·소통 강화
- (온라인 소통 강화) SNS, 모바일 등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소통 콘텐츠 기획 활성화, 젊은층과의 국민소통 및 정책알림 강화
 - * 메시지가 쉽게 전달되도록 짧은 동영상, 카드뉴스 등 신규기법 확대

- (국민체감 홍보) 안보·경제·민생·안전,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중점 정책과제에 대한 홍보 메시지 기획 기능을 확충, 국민체감도 제고
 - * 민생경제 살리기, 안전사고 사전예방, 노인·여성·아동대책 등
- 언론 등의 눈높이에 맞는 보도(홍보)자료 작성·제공을 통해 보도·기사화될 수 있도록 노력
 - * 실제 달라진 변화, 예상되는 성과 등 지속·반복적 홍보 추진

□ 시민사회 협력 강화

- (소통 활성화) 시민사회발전위원회* 운영,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사회 및 대국민 통합 행보 보좌
 - *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시민사회 발전 방안 모색 및 정부-시민사회 간 소통·협력 도모
-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,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등 긍정·희망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간담회 등 행보 추진
- (협력 강화)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·연찬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 역량 강화 지원

◆ 국정 주요과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·관리를 통해 최대한 성과를 도출하고, 국정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

□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 재정비

- 140개 국정과제, 25개 핵심개혁과제, 100대 정상화과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, 실질적 이행과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과제 재정비
-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 △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항 △추진 가능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과제내용 최종 조정·보완(~'17.2월)

□ 주요과제 마무리를 위한 집중관리

- 상반기 완료필요 과제 중심으로 집중관리, 여타 과제도 상반기 중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·계획을 조정하여 관리
- 이행점검, 심층분석, 국정회의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처의 조기 이행 노력 독려

□ 주요 국정성과에 대한 대국민 소통 추진

- 국민체감도·인지도가 높고,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 과제를 선정*,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 강화
 - * △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△자유학기제 시행 △군복무여건 개선 등
- 5년간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성과,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, 백서로 정리하여 국민인지도 제고에 활용

※ 국정과제 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

- 역대 정부 국정과제 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종합·분석하여, 국정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·관리시스템 검토
- 평가실 내 T/F 구성,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, 하반기 입법·제도화 추진

- ◆ 총리실의 의제설정과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'국정협의체' 등을 통해 전략적 대응 추진

□ 전략적 현안 관리

- (상황관리체계) 일일상황점검을 통해 국정 소분야 상황관리, 정부대응 이슈 적극 발굴
 - * 언론 보도사항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정책자료,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채널 활용
- (의제 관리) 쟁점 또는 이슈화 가능성이 높은 의제들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관리, 일관되고 효과적인 국정운영 보좌

□ 국정협의체 운영 활성화

- (국무·차관회의) 국정운영 관련 대국민 메시지 전달 및 국정현안에 대한 인식공유 및 부처간 One-voice 유지의 장으로 활용
- (국가정책조정회의) 경제활력 회복, 민생안정 등 국가적 현안 및 범정부적 조율 필요사항 중심으로 선제적 안전 발굴·상정
 - 금년에는 실질적 정책조정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, 부처간 또는 이해관계자간 이견 사항도 적극 상정·논의 추진
- (분야별 위원회) 민·관합동으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 주재 위원회* 중심으로 정부입장 조율 및 대책 마련
 - * 총리 주재 위원회 : 사회보장위원회, 국제개발협력위원회,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

- ◆ 조정과제 적극 발굴·조정을 통해 사안별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갈등관리로 정책추진의 장애요인 제거

□ 정책조정 체계 강화

- (조정과제 발굴) 부처요청사항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내·외부의 정보를 종합, 부처간 이견사항 등 조정수요 발굴
 - * 국회 법안심사, 언론보도, 정책참고자료, 학계 및 연구기관 보고 등 검토
- (관리체계 구축) 조정필요과제를 목록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 추진
- (조정의 실효성 제고) 조정사안 분석을 통해 조정방안, 조정주체 등을 결정하는 등 적극 조정 추진
 - * 사안의 성격·시급성에 따라 관계 장차관회의 개최여부 검토

□ 적극적 공공갈등 관리

- (갈등현안 마무리) 주요 추진 정책 중 갈등현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범정부적 갈등 해결역량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 도출
- (시스템 개선) '17년 상반기, 갈등관리규정 개정 및 갈등관리 점검·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등을 통해 부처별 갈등예방 및 해결노력 독려
- (역량강화) 대상별·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기관별 갈등관리 담당자들의 갈등관리 능력 향상 지원
 - * 과제예시 :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, 대도시 공군기지 이전 등

- ◆ 총리실 중점과제에 대한 성과중심 관리·추진을 통해 실질적 국정성과 창출 지원

< 정책과제 성과 창출 >

□ 규제혁신을 통한 민생안정·미래대비

- (민생지원 규제환경) 중기·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서민층의 어려움 해소*를 위한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
 - * 주거·보육·교육·의료·금융·교통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저소득층·장애인·노약자·소상공인·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대상
 - 민관합동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한 현장애로 신속해결
- (미래대비 규제설계) 신산업투자위원회 중심으로 인공지능·가상현실 등 빠르게 재편되는 글로벌 산업지형 변화에 선제적 대응
 -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등 시장진입부터 상용화까지 성장주기별 규제개선
- (경제활력 제고) 행정조사 등 각종 부담경감,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
- (시스템 혁신) 규제비용관리제 안정적 정착, 규제개혁 매뉴얼 개정, 맞춤형 규제개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규제개혁 시스템 완결
- (체감도 제고) 그간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점검 및 현장조사 실시, 현장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 대국민 소통 강화

□ 기후변화 대응

-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·할당계획, 2030온실가스 감축이행로드맵 및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,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
- 파리협정 발효와 관련, 우리나라 여건과 협상 전략을 고려한 국가제안서*를 마련해 후속협상** 적극 참여

* 투명성('17.2), 탄소시장·적응보고·이행준수('17.3), 감축목표·이행점검('17.4) 등

** 부속기구회의, 워크샵, 라운드 테이블 등

□ ODA 성과 제고

- 해외재난(분쟁·자연재해) 발생시 인적·물적 지원 확대를 위한 인도적 지원 적극 참여 및 기여 확대(16년 461억원 → '17년 900억원)
- ODA 정책 및 집행에 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(28개국)간 상호학습 절차인 동료검토 실시를 통해 그간 ODA 성과 점검(~17년말)
 - * '12년 동료검토 이후 매 5년마다 실시('15.11월 중간점검 실시)

< 법질서 확립 및 테러 대비 >

□ 부정부패 척결

- (국민생활 밀접비리 근절) △고질적·반복적 민생침해 △공정성 훼손 및 경제질서 저해 △국민안전 분야 비리·부조리 근절에 집중
 - * 유치원·어린이집 운영비리,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등
- (국가재정 손실비리 근절)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누수 방지로 재정건전성 확보
- (대형국책사업 관리) 현장중심의 상시 검증체계 운용을 통해 비리·비위의 적발뿐만 아니라 비리의 사전제거 및 예산낭비 방지
 - * 도로·철도·항만 등 SOC, 환경·문화·체육·관광시설 건설 등

□ 공직기강 확립

- (복무점검 강화) 공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취약분야 기획점검 등을 통해 비위가능성 차단 및 제도개선 추진
- (정책현안 점검 추진) 주요 정책현안 및 민원대응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여 국민의 정부 및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
- (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) 정책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
- (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)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자발적 청렴활동 등을 확대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
- (공직자 사기진작)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활동 등을 강화하고 고충처리를 지원, 공직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공직자들의 자긍심 고취

□ 테러대비태세 강화

- (법령·제도 개선) '16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대테러 관련 규정* 및 테러대응 실무매뉴얼 등 개정
 - * '테러경보발령 규정', '테러신고자 포상금·피해지원금·특별위로금 지급규정' 등
- (테러위험요소 사전 제거) '탑승자정보 사전확인시스템'* 전면 시행 및 출입국 관리 등을 통한 테러위험인물의 국내 입국 원천차단
 - *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국내로 취항하는 항공편의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여 테러위험인물 입국을 차단하는 제도
- (국가중요행사 안전 확보) 'U-20 월드컵 축구대회'(17.5.20~6.11), '평창동계올림픽'(18.2.9~2.25) 대비 대테러 안전활동 대책 수립·시행
- (대테러 역량 강화) '국가 대테러종합훈련' 실시, 경찰·소방 등 현장 일선요원 대상 초동대응 교육 등 실전 중심의 교육·훈련 실시

< 주요 국책사업 지원 >

□ 세종시 발전 지원

- (세종시지원위원회) 총리 주재 '세종시지원위원회'를 세종시 발전 지원방안*의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활성화하여 운영
 - * △행복청·세종시 '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△중장기 발전 전략, 행정 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변경 △세종시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등
- (정주여건의 질적 개선) 교통·교육·의료분야 등 정주여건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
 - * 주요 불편사항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T/F 구성, 시내버스 노선 신설·조정, 주차장 확보, 신호체계 개선 등 검토
- (행정효율성 개선 및 정책역량 강화) '행정효율화 추진협의체' 구성·운영, 영상회의 등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으로 행정효율성 확보
 - 전문가-공무원간 소통 활성화, 교육 확대 등 공무원 직무전문성 제고
- (자족기능 확충) 공동캠퍼스 조성 등 대학유치 지원, 기업·대학·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투자유치활동 노력 강화

□ 주한미군 이전

- (평택기지 이전*) '17년 평택기지 건설과 대부분의 부대이전 완료 예정(97%), 사업 추진간 제반 문제점 관리로 안정적인 이전 지원
* 16.12월 기준, 부지매입(100%), 평택 기지건설(94.8%), 주민지원사업(85.1%) 등
- (미군기지 반환) 반환예정 26개 기지에 대해 반환협상* 추진 지원과, 반환기지 주변 환경오염 갈등은 관계부처·지자체와 협의·해소 추진
* 원주 캠프 롱·부평 캠프마켓 등 지자체 개발사업 지연 기지의 개별협상과 전체기지 반환협상 병행 추진

□ 새만금 사업 활성화

- (투자여건 조성) 기반시설 조기 확충 및 용지조성 활성화, 수요자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마련
- (개발계획 보완)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개발전략 검토·개선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 구체화 지원

□ 제주특별자치도 지원

-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확대 등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(90개)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추진
* 관계부처 협의 및 제주지원위 심의('17.상),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추진('17.하)
- 영어교육도시, 신화역사공원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추진지원
* 영어교육도시 내 SJA 국제학교 개교('17.10),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부분개장('17.12) 등

< 조세심판 및 출연연 관리 >

□ 신속·공정한 조세심판

- (신속·공정한 사건처리) 처리기간을 단축*하고, 심판당사자의 심판 참여 확대 및 절차적 권리를 보장, 사건처리의 공정·투명성 제고
* 신규 소액사건의 경우 법정처리기간(90일) 내에 처리 노력

- (국민중심 서비스) 심판결정서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 개선, 원거리 청구인을 위한 지역순회심판제도* 정례화 추진
 - * 분기당 1회 이상, 연간 5회 이상 각 지역별로 균등 실시
- (전문성·청렴도 제고)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직무교육과 청렴연수 등 교육 확대 실시

□ 출연연구기관 지도·관리 강화

- (정부정책 지원연구 강화) 저출산, 미래산업, 기후변화 등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간 협동연구 등 추진
- (경영 투명성 제고) 출연연구기관 표준재정정보시스템 확산*을 통해 예·결산 제도 투명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
 - * 총 27개 기관 중 5개 기관 既도입, '17년도 5개 기관 도입 등 '20년까지 단계적 도입

구분	주요 일정
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 시무식 (1.2) • 2017년 정부업무보고 (1.4~1.11, 총5회) • '16년 정부업무평가 완료 및 후속조치 • '17년 핵심개혁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(1월말) •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 및 추진전략 마련 (복지부) • 제50차 중앙 통합방위회의(1.19) •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발표 (통일부) • 201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작성 및 발표 (통일부) •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 지급 마무리 (산업부 등)
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월 임시국회 (교섭단체대표연설, 대정부질문 등) • 평창 올림픽 D-1년 행사 (2.9, 문체부) • 코리아그랜드세일 (1.20-2.28, 문체부) • 국가안전대진단 (2.6~3.31, 안전처) • 조세심판 통계연보 발간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편성지침 시달 (기재부 → 각부처) • '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• 국정과제 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• '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지역 선정 (복지부) •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(교육부) • 범정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(안전처) •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(여가부) • 조세심판 결정서 전자열람제도 시행 • '17년 KR(Key Resolve)/FE(Foal Eagle) 연습 • 천안함 피격사건 7주기 행사(3.26)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월 임시국회 (교섭단체대표연설, 대정부질문 등) • 재·보궐선거 (4.12) •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(복지부) •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제출
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(5월중) • '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(요구액 기준)

구분	주요 일정
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월 임시국회 (교섭단체대표연설, 대정부질문 등) •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('18년 재난안전예산 심의 → 기재부 통보) •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팀 방한 • 국정과제·핵심개혁과제·정상화과제 상반기 점검
7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법개정안 발표 (기재부) •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(복지부) •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(복지부) • 북한인권 실태조사 사례보고서 발간
8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월 임시국회 (결산심사 등) • 지자체 감염병 위기관리역량 평가지표 개발 (복지부) • 을지연습(UFG) • 북한인권실태조사 연례 종합보고서 발간
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기국회 (예산안 시정연설, 교섭단체대표연설, 대정부질문 등) •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(기재부) • 2017 서울안보대화(SDD)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정감사(잠정) 및 예결위 전체회의 • 서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(ADEX) 2017
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결위 및 상임위 예산안 심사 •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(복지부) •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 • 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•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('18~'22) 수립 • 연평도 포격도발 7주기 행사(11.23)
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안 국회통과(12.2) • 제12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개최 (문화재청) •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('18~'22) 수립 (여가부) • '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(확정액 기준) •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최종회의 • '17년 정부업무평가 실시 • 6.25 전사자 유해발굴 합동봉안식

1. 주요 국정성과

□ 공공부문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

- (정부조직 개편) 안전사회 구현 및 공직개혁을 위한 조직개편*('14.11.19)
 - * △국민안전처 신설(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) △인사혁신처 신설(관피아척결 등 공직 개혁을 위한 전문성 확보) △사회부총리 신설(사회분야 정책의 효율성·책임성 제고)
- (공무원연금 개혁)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해소를 위해 더내고 덜받는 '공무원연금 개혁' 추진, 497조원 절감 효과 거양
 - * '16년도에 보전금 약 1.5조원 감소(종전 3.7조→개정 2.2조), 향후 30년간 185조, 향후 70년간 497조원 절감 전망
- (공공기관 개혁) 2단계에 걸친 「공공기관 정상화 개혁*」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및 업무 생산성 제고
 - * (1단계: '13~'14년) 부채감축('13년/217%→'15년/183%), 방만경영개선(연간 2천억원 복리후생비 절감) (2단계: '15년~) 성과연봉제 확대('16년), 임금피크제 도입('15.12월), 기능조정('15~'17년)
- (정부3.0 생활화)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국가중점데이터 전면 개방·확산 등을 통해 국민생활 및 창업의 편리성 제고
 - *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(행복출산·안심상속·연말정산간소화 등) 제공, OECD 국가 중 공공데이터 개발지수 1위 달성('15.7월)
- (재정개혁) 유사·중복사업 통폐합*, 보조금 개혁**, 재정건전화법 제정('16.10 국회 제출) 등 추진, 지출 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관리기반 마련
 - * 총 689개 사업('15예산 370개, '16예산 319개) 통폐합, '17예산 205개 사업 추가 통폐합
 - ** 제재부가금 부과, 부정수급시 보조사업수행 제한 등을 담은 보조금법·시행령 개정('16.4월)
- (청탁금지법 시행) 오랜 부패관행 청산 및 청렴·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, 법에 대한 높은 지지율 및 긍정적 변화 확산*
 - * 법 시행 찬성 85%('16.12), 각자내기 일상화, 접대문화 개선 등

□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

- (경제혁신) '경제혁신 3개년 계획*'을 수립('14.3월),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
 - * G20국가 성장전략 중 효과 1위, 이행실적 2위 달성(IMF-OECD, '14~'15년),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인정
- (창조경제)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,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경제제도약 플랫폼 마련
 - * 주요성과 : 창업·중소기업 3,757개사 지원, 투자유치 4,265억원, 취업연계 3,914명
- (FTA 확대) 과감한 FTA로 시장규모·교역비중 확대, 총 52개국과의 FTA 발효, 경제영토 세계 3위 수준(全世界 GDP의 73.5% 시장규모) 확보
 - * △호주('14.12월), 캐나다('15.1월), 중국·베트남·뉴질랜드('15.12월), 콜롬비아('16.7월) FTA 발효
△한-중FTA 경제적 효과 : 10년간 실질GDP 1%, 소비자후생 150억불, 고용 5.4만명 증가
- (핀테크 활성화)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 완료('16.12.14), '17년초 출범 예정
- (제조업 3.0) 제조 순 과정에 ICT를 융합,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
 - * '16.12월 기준(누적) 2,800개 구축 지원('20년까지 1만개 목표), '16.9월말까지 구축완료된 1,566개사 분석결과 불량률 51% 감소, 원가 절감 25% 달성
- (스마트 팜)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(ICT)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팜을 농가에 집중 보급*, 농업의 첨단화·수출산업화 촉진
 - * '14년(시설원예/축사) 60ha/30호 → '15년 1,077/234 → '17년 4,000/350
- (기후변화대응)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,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(BAU 대비 △37%)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립('16.12월)
- (일자리 창출 토대) 고용복지+센터 확충('16.12월, 70개), NCS 기반 능력 중심채용 확산 등 일자리 중심 정책운영으로 4년간 취업자 수 지속 증가
 - * △취업자 수 : ('13)2506.7만명 → ('16.1~11월)2624.1만명
△고용률 : ('02)63.3% → ('07)63.9% → ('12)64.2% → ('16.1~11월)66.0%

- (일학습병행) 참여 기업·학습근로자 지속 확산으로 고졸 취업률 증가,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추진

* △(참여기업/학습근로자) '14년 2,079기업/3,197명 → '16년 8,431기업/34,856명
 △('13년 일학습병행제 도입 후 특성화고 취업률) '13년 40.9% → '16년 47.2%

□ 교육개혁 및 맞춤형 복지 강화

- (자유학기제) 초·중학교(3,213교) 도입('16.3월), 다양한 직업체험 지원 및 수업방식 개선으로 학부모 및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

* 자유학기제 참여 전반적 학교만족도('16년, 5점 만점)
 : (학생) 3.95 → 4.09, (교원) 3.94 → 4.10, (학부모) 3.90 → 3.94

- (반값등록금)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지원을 확대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,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

* (학자금 대출금리 인하) '09년 5.8% → '16년 2.5%

- (대학구조개혁) 1주기 평가('15.8월) 결과에 따라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, 자율적 정원감축 유도 1주기 감축목표(4.4만명) 달성

* (정원감축 계획) 1주기('14~'16년) 4만명, 2주기('17~'19년) 5만명, 3주기('20~'22년) 7만명

- (맞춤형 급여) 최저생계비 이하 일괄 급여에서 저소득가구의 생활여건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('15.7월), 저소득 취약계층 추가 보호

* △추가보호 : 34만명 ('15.6월 132만명 → '16.6월 166만명)
 △급여증가 : 10.5만원 ('15.6월 40.7만원 → '16.6월 51.2만원)

- (영유아 보육) 무상보육확대('13년~, 0~5세), 국공립·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비율 증가('12년 22% → '16년 31%), 초등 돌봄교실 확대*

* '14년 1·2학년 → '15년 1~4학년 → '16년 1~6학년 순차적 확대

※ 초등돌봄교실 만족도(교육부) : ('14) 92.5% ('15) 94.8% ('16) 95.7%
 동아일보 정부 정책 평가결과, 초등돌봄교실 2년연속 최상위('15년 1위, '16년 2위)

- (기초연금) 만 65세이상 노인(소득하위 70%)에 월 20만원 지급('14.7월~), 수급자수 지속 확대 및 노인빈곤율 개선

* △수급자수 : ('12) 393만명 → ('14) 435만명 → ('16.10월) 458만명
 △노인빈곤율 : ('13) 49.6% → ('14) 48.8% → ('15) 45.7%

- (의료부담 경감) 4대 중증질환(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질환) 진단·치료를 위한 모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적용('16.12월, 환자부담 7,657억원 경감)
 - * 고위험 임신부(본인부담 20 → 10%), 틀니·임플란트 확대(75 → 65세),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등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보장에 1.8조원 재정 투입

□ 서민생활 안정화

- (주거안정) 공공임대주택 역대 정부 최대 수준(54.4만호) 공급, 주거급여(연 81만호), 전월세·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
 - * (공공임대) 참여정부 39만호(연8만) → MB정부 46만호(연9만) → 現정부 54만호(연11만)
- (서민금융) 서민금융상담·고용·복지서비스를 연계·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 컨트롤타워인 '서민금융진흥원' 출범('16.9.24)
- (일가정 양립) 출산휴가·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성화, 유연근무 확산으로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
 - * △(육아휴직) '12년 64천명 → '16.11월 82천명 △(시간선택제) '12년 866명 → '16.12월 12,384명
△(경력단절여성수) '15년 2,053천명 → 1,906천명(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)

□ 국민안전체계 확립

- (안전혁신) 「안전혁신 마스터플랜」을 수립('15.3월), 국무총리 주재 안전회의체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집중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
 - * △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('15.7월~, 11회 개최) △안전관계장관회의('16.3월~, 5회 개최)
 - 도시철도, 산불, 지반침하, 사업용 차량, 연안여객선, 학교·공연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별 안전 강화대책 마련
- (4대악 근절) 성·가정·학교폭력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국가정책 조정회의 등을 활용,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재범률 등 감소
 - * △(성폭력 재범률) '13년 6.4% → '16.11월 4.5% △(가정폭력 재범률) '13년 11.8% → '16.11월 3.8%
△(학교폭력 피해응답률) '13년 2.1% → '16년 0.85% △(식품안전 만족도) '13년 72.2% → '16년 84.6%
- (국가방역체계) 개편방안 마련('15.9월), 역학조사관 확충 등 총 48개 과제중 44개 완료
 - * △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△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△감염방지 시설기준 강화
△의료기관 간 의뢰·회송 및 진료협력 활성화 등 미완료 4개 과제 '17.1월 중 완료 예정

□ 평화통일기반 마련

- (대북제재) 북한의 지속적 도발행위에 대응하여 전방위적 외교 역량을 집중, 북핵 불용 원칙하에 국제사회 동참을 견인
 -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('16.3.2)와 이를 확대·강화한 결의 2321호* ('16.11.30)를 채택하고, 이어 우리정부 독자적 제재조치** 시행
 - * △북한 석탄수출 상한 설정 △개인·단체 제재대상 추가 △북한 외교활동 제한 등
 - * △유엔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우리정부 독자제재 조치 마련('16.3.8) △유엔 결의 2321호채택 이후 추가 독자제재 조치 발표('16.12.2)
- (테러대비) 테러방지법 제정*('16.3월) 및 대테러센터 출범('16.6.4) 이후 새로운 국가 테러대응체계 조기 안착, 국내외 테러 현안에 적시 대응
 - * 국가 대테러기본계획 수립 및 테러경보발령 규정 등 하위 규정 제·개정, 대테러 특공대 등 전담조직 지정·운영
- (사드배치) 북한 핵·장거리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위권적 조치의 일환으로 사드배치 결정('16.7.8)
 - *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('16.9.30)
- (북한인권법) 국회 발의 11년 만에 여야 합의를 통해 '북한인권법'을 제정, 북한주민 인권 보호·증진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기반* 마련('16.3.3)
 - * △북한인권재단 설립,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,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설치 등 △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·기록, 국제협력,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

2. 총리실 성과

□ 국정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

- (국정협의체 운영) 국무회의('16년, 57회), 국가정책조정회의*('16년, 17회), 총리 주재 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

* 정신건강 종합대책(2.25), 공항보안 강화대책(3.10)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(8.25),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(9.8) 등 수립

-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,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대응

< 주요현안 대응 예시 >

- (메르스 대응) 범정부대책회의(26회)를 통해 총력대응,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마련('15.9월)
- (안전 사각지대 해소)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(11회), 안전관계장관회의(5회)를 통해 30여개 대책 수립
- (미세먼지) 총리·국조실장 주재 회의(7회),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 수립('16.6월)
- (지진 대응) 총리·국조실장 주재 회의(6회)를 통해 범정부「지진방재 종합대책」마련
- (평창올림픽) 총리 주재 대회지원위원회(9회), 대회준비상황 점검 및 범정부 지원정책 조정
- (개성공단 지원) 총리실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운영(총6회)을 통해 개성공단 지원대책 마련
- (청탁금지법) 관계부처회의(9회), 관계부처합동 법령해석지원 T/F를 통해 법 해석 논란 해소
- (물관리 대책) 국조실장 주재 물관리협의회의(3회), 가뭄 예경보, 대체수자원 활용 중장기대책 마련

- (국정운영 보좌) 탄핵소추의결 이후('16.12.9~) 국정공백을 방지하고,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비상체계 가동

* △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개최 △안보·민생관련 현장행보 △사회 각계 원로, 언론, 정치권 등 소통 강화 등

- (갈등과제 관리) 신규갈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, 잠재갈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현장소통 등을 통해 갈등예방 및 해소* 추진

* △밀양송전탑 건설 △공무원 연금개혁 △철도 경쟁체제 도입 △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△김해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갈등과제 완화·해소

- 각 부처의 갈등관리 내실화를 위해 갈등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, 갈등관리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·평가

* 갈등관리 매뉴얼('13.9) 및 개정판('16.12),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('15.1) 배포

□ 국가적 개혁과제 성과창출 지원

- (핵심개혁과제) '15~'16년간 4대 구조개혁 등 6대 분야*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집중관리**, 주요 개혁성과 창출 지원

* △공공개혁 △노동개혁 △교육개혁 △금융개혁 △경제혁신 △통일준비

** 월별 대표지표 점검, 분기별 종합점검, 총리님 특별점검('16년 3회) 등 실시

- (국정과제) 140개 국정과제 확정('13.5월), 집행현장의 협업을 집중 점검하고 월별 점검 및 연말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이행 관리

* 총 619개 세부과제 중 540여개 과제(87%)가 차질없이 이행중 ('16.12월 기준)

- (비정상의 정상화)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집중관리와 심층분석을 통해 구조적·관행적인 적폐 해소 추진

* △민간위탁 제도개선 △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△TV홈쇼핑 불공정 관행개선 방안 등 마련

□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

- (강력한 리더십)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(5회)를 통해 입지·인증·신산업·금융·외투 등 파급력 큰 분야 집중 혁파

- (현장 규제혁파) 규제신문고*,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** 등을 통해 국민·기업의 규제개혁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규제애로 신속 해결

* '14.3월 개설 이후 수용률 40% 수준 도달(3,850건/9,691건), 특히 해결된 과제 중 70% 이상이 국민생활 및 중소기업인 규제개선 사항

** '15.7월 신설 이후 8차례 개최(총리 주재, 격월 개최), 지역 규제건의 집중 해소 등

- (신산업 규제) 민간주도 신산업투자위원회 신설('16.3월), '원칙개선·예외소명' 네거티브 방식 적용, 국제적 수준에 부합 하도록 규제 재설계

* 드론·자율차·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분야 민간건의 271건 중 255건 개선

- (지자체 규제) 전수조사를 통해 국토·산업 등 11대분야 지방규제 6,440건 정비('15년),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규제 150건 개선('16년)

* 전국규제지도 작성·공표, 경제활동친화 우수등급 지자체 2배 이상 증가 ('14년 68개 → '16년 135개)

- (규제시스템 개선) 규제개혁 7대 원칙 제시('16.10월), 규제비용관리제 시행(총리훈령, '16.7월),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('16.8월), 인허가 간주제 및 신고제 합리화('16.6월) 등 추진

□ 부패척결을 통한 법질서 확립

- (부패척결추진단 운영)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인 부조리·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**법정부 부정부패 근절 추진체계 강화**
 - * 총리실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설치('14.8월), 법질서관계장관회의 신설·운영('16.2월)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협의·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
- (4대 백신프로젝트) 부패의 사후적발·처벌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**예방시스템 도입으로 비리 사전차단 및 예산낭비 방지**
 - *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검증으로 비리적발(16건 78명), 예산낭비 방지(1,756억원), 주요시설물 안전확보(41건), 제도개선으로 매년 680억원 예산절감 등
- (생활밀접분야 비리 근절) **민생경제, 안전, 건강 등 국민체감도 높은 생활밀접 분야의 부조리·비리 적발 및 제도개선 추진**
 - * 노인장기요양기관, 학교급식, 아파트 관리, 건설안전, 환경사업, 규제개혁 저해 등